

與野 원내대표 내년 예산안 막판 담판

지역사랑상품권·대통령실 이전 등은 이견 여전 주호영·박홍근, 세입 부수법안도 일괄협의 전망

63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운명이 결국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막판 담판에 좌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5일 이들 동안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를 가동해 일부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2+2)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 감액에 관해 의견 차이 있던 걸 이견을 좁힌 게 많다고 보고 받았다"며 "원내대표간 회동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요하면 오후에 만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사안은 협의했고 일부 사안은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오늘부터 진행될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선 합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 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

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예산은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은 넘겼으나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변수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책안' 강행 처리시 예산 협의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처리)이 지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전략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도 관심사다.

애초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소위는 쟁점 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개최가 불발됐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좀처럼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 주변에서는 이들 법안 역시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일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김진수기자

민주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 악마화"...尹정부 대응 맹비난

'양당 지도부 중재' 제안 심상정 "대통령이 파업 조정"

더불어민주당은 6일 장기화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맹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했다"며 "이 사태를 당장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즉각 재가동하라"고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지금처럼 원안을 고수하는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하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중재하기 어렵다면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에 강경·갑박으로 일관한다"며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괄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정의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 인사들이 민주노총을 '조선노동당 2중대'로 비유했다"며 "낡은 색깔론을 꺼내 든 것은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노조 혐

오'로 끌어올리겠다는 한탕주의"라고 비난했다.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에게 불행이 닥쳐오려고 정부는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밀어붙였다. 이번 파업은 명백히 대통령이 조장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무능과 실정을 만회하려고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매우 질 나쁜 정치 기획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반노동적, 반기본권적 행위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데 사실을 정확히 잘 안 밝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 장관이 해왔던 태도로 보면 만약 본인이 안 갔다면(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찰리스트 오빠와(유튜브 매체) 더탐사를 바로 고발했을 텐데, 왜 고발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인) 찰리스트가 경찰에 가서 한 이야기가 진실인지, 원래 본인이 남자친구에게 한 게 더 객관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월 2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 본인이(술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그 사실을 밝히면 된다고 했다"면서 "그런

전남·장흥군, 공무원 노사문화 대통령 표창 도-22개 시·군 노조연합회 단체교섭 체결

행정안전부는 6일 "올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9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 중 전남도와 장흥군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노조연합회가 단체교섭을 체결해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흥군은 '2050 탄소중립 기부 이어가기'에 따른 공무원 숲길 조성 및 각종 봉사활동으로 군과 노조가 노사관계의 사회적 책임성을 실현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악성 민원인 고발 및 인력 감압 고충 접수처 설치로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이 밖에 광양시 등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정부 포상과 인증패를 수여하는 2022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은 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진수기자

특히 영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정세희씨는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에 참여했다. 정씨는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거쳐 비수도권에 취업 후 정착했다. 정규직이 된 후 전남지역 생산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는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담당 프로듀서가 됐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으며, 4년간 약 11만7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2021년 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66.5%, 참여자의 비수도권 전입 비율은 95.0%다. /김진수기자

'전남 청년 마을' 정세희씨 최우수상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워크숍

행정안전부는 6일 "7일 오후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워크숍을 열고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우수 수기와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밝혔다.

체류 수기 우수자 12명, 사업 추진 성과 우수 자치단체 2곳, 유공자 16명이 상을 받는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류수기를 공모했다. 공모에는 총 203점(수기 170점, 영상 33점)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수기 부문과 영상 부문 각 6점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김진수기자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인) 찰리스트가 경찰에 가서 한 이야기가 진실인지, 원래 본인이 남자친구에게 한 게 더 객관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월 2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 본인이(술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그 사실을 밝히면 된다고 했다"면서 "그런

김성환 "청담동 술자리" 진실 여부 따라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심야 술자리 의혹을 자신이 당 회의에서 거론한 데 대해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따라 적정하게 유감 표명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인) 찰리스트가 경찰에 가서 한 이야기가 진실인지, 원래 본인이 남자친구에게 한 게 더 객관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월 2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 본인이(술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그 사실을 밝히면 된다고 했다"면서 "그런

데 사실을 정확히 잘 안 밝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 장관이 해왔던 태도로 보면 만약 본인이 안 갔다면(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찰리스트 오빠와(유튜브 매체) 더탐사를 바로 고발했을 텐데, 왜 고발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義)로 윤석열 대통령의 판지 물색 과정에서(역술인) 천공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천공은 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구설에 올랐고, 대통령 행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만약 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나라의 국가 운영을 무속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실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